광주 신보기금 부실률 전국 최고

6월 말 현재 7.8% … 전국 평균 2배

부도 건설업체 속출 따라 … 4년째 1위

광주지역 신용보증기금 부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부실률이 최근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산업구조의 다변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부실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광주지역 부실률이 7.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0%보다 1.8%포인트 상승했고, 전남 3.8%, 전국 평균 4.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부실금액도 405억원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부실금액(604억원)의 67%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올해 초 금호산업과 남양건설·금광기업 등 광주·전남지역 '빅3' 건설사의 잇단 위기가 협력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부실률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연속 부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신보 부실률은 지난 2007년 5.2%, 2008년 6.8%, 지난해 6.0%로 전국 평균인 3.9%, 5.1%, 4.4%를 크게 웃돌았다.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율도 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신보가 보증을 선 기업이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 광주지역 대위변제율은 7.4%로 전국 최고다. 지난해 6.6%보다 무려 1.2%포인트 높아졌다. 대위변제금액도 지난 2007년 386억원에서 2008년 1052억원, 2009년 673억원, 올 상반기 381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액수의 57%를 넘어섰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부실 현황
(2010년 6월 현재, 단위 : 개·억원·%)

구분	업체수	보증잔액	부실금액	부실률
서울	50,508	100,617	1,973	4.0
경기	52,264	102,179	2,078	4.1
인천	13,742	27,463	665	4.9
부산	15,589	25,162	465	3.7
경남	14,458	26,728	583	4.4
대구	13,280	20,711	303	2.9
경북	11,758	22,745	493	4.4
울산	2,811	5,199	84	3.3
광주	7,668	10,432	405	7.8
전남	7,314	10,166	194	3.8
전북	8,201	11,357	246	4.4
대전	6,398	8,301	146	3.5
충남	7,321	15,040	294	3.9
충북	6,178	10,975	379	7.0
강원	7,894	8,935	161	3.6
제주	3,746	3,705	82	4.5
합계	229,130	409,776	8,551	4.2

〈자료 : 조영택 의원실〉

이처럼 광주지역 부실률이 높은 것은 산업구조가 부실위험이 높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전남지역은 올 상반기 부실률이 3.8%로 지난해 4.6%보다 크게 줄었다. 부실금액도 지난해 한해동안 440억원에서 올 상반기 194억원으로 44% 수준에 그쳤다. 대위변제율도 4.6%로 전국 평균(4.4%)과 비슷하다.

한편 올해 6월말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에 신보 보증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광주 7668개 업체에 1조432억원, 전남 7314개 업체 1조166억원 등 총 2조598억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생이 뽑은 시장경제 모범기업

포스코 1위 … 삼성·SK 順

대학생들은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모범적인 국내기업으로 포스코를 꼽았다.

4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대학생 2천74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7일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하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253명 가운데 861명(38.2%)이 포스코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9.1%), SK(9.0%), 현대자동차(8.7%), LG(7.5%) 순이었다.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개발해야 할 블루오션 시장으로는 응답자 2691명 가운데 813명(30.2%)이 '교육시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시장(26.2%), 농업시장(19.0%), 방송시장(14.9%), 법률시장(9.7%)을 꼽았다.

한편, 현 정부의 하반기 국정코드인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2290명의 83.4%인 2290명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정책별 서민의 기준이 상이하고 적용 대상 기준이 복잡하여 일반 시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자가 되기 힘들다'(46.5%), '근본적으로 경기활성화 및 내수진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22.8%),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14.1%)는 반응을 보였다.

이 조사에서 친서민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16.6%였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넘어서

광주·전남 24만1000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수급자는 24만1000명이다.

4일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300만여명(일시금 제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245만명, 장애연금 11만명, 유족연금 44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수급자 300만명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2003년 4월 100만명, 2007년 2월 2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3년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매일 766명씩, 매월 평균 2만3000명씩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수급자는 24만1000여명으로 노령연금 19만8000명, 장애연금 4800명, 유족연금 3만8000명 등이며 이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각각 423억원, 18억8000만원, 68억1000만원 등 총 510억6000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내 최고부자 삼성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 1조 이상 19명

우리나라에서 1조원이 넘는 개인재산을 가진 부호가 지난해보다 5명이 늘어난 19명을 기록했다.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고 자수성가 부자는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준일 락앤락 회장 등 4명이었다.

4일 재벌닷컴이 1천799개 상장사, 1만3천589개 비상장사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와 주식매각 등으로 취득한 현금자산 등을 평가한 결과, 개인 재산이 465억원 이상을 기록한 부자는 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원 이상을 기록한 19명을 포함해 개인 재산이 1천억원을 넘는 재산가는 216명에 달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상장사 및 비상장사 주식지분 가치와 배당금 등을 모두 합친 개인재산이 8조7천3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상장사 주식지분 가치가 많이 늘어난데다 비상장사인 현대엠코 등의 주식가치 및 배당금 등을 합쳐 6조5천670억원으로 평가돼 2위였다. /연합뉴스

중국산 배추 검역 정부가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 직원들이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한 보세냉장창고를 방문해 최근 수입된 중국산 배추를 검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반기 고의체납자 326명 적발

6개 지방 국세청 2220억 추징 … 체납자 처벌 강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명의위장 하는 등 지능적,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상반기 6개 지방국세청 산하에 운영 중인 체납추적전담팀(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 25개팀, 50명)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22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체납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처분 전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체납처분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 한 후 자신이 계속 사업을 해온 체납자들의 탈법적 행위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현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7월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대응강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방 국가산단 LNG 공급 가격 수도권보다 ㎥당 24.20원 비싸

민주 김재균의원 국감자료

지방의 국가산단에 공급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단가가 수도권 국가산단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국가산단·외국인투자지역에 공급되는 LNG 공급 단가가 수도권의 국가산단에 비해 ㎥당 평균 24.20원 비쌌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 있는 10곳 국가산단의 평균 LNG 공급단가는 ㎥당 666.60원이었으나 지방 소재 국가산단 14곳의 평균 공급단가는 ㎥당 690.80원이었다.

지방 국가산단 가운데 가장 공급단가가 비싼 곳은 경남 창원으로 ㎥당 718.07원이었으며 광주의 북구 오룡동 일대의 국가산단의 공급단가도 ㎥당 684.77원, 여수산단의 공급가는 ㎥당 683.00원, 대불산단의 공급가는 ㎥당 688.78원이었다.

지난해 대불산단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이 2060만㎥인 점을 감안하면 대불산단은 수도권 산단에 비해 1년에 4억5690만원을 LNG 연료비로 지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 공급되는 LNG가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주로 생산시설 연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제품단가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LNG 공급단가의 차이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기술력·인력·판로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기업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79.29 (+2.56)
▼ 코스닥지수	493.78 (-1.28)
▲ 금리 (국고채 3년)	3.30% (+0.04)
▼ 원·달러 환율	1,122.30원 (-8.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호남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차량용 충전시스템' 선정

광주시는 지식경제부의 2010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가 신규사업으로 호남권의 '승용·상용 전기자동차 겸용 급속 충전시스템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간 연계·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호남권 추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승용·상용 전기자동차 겸용 급속 충전시스템 개발사업'은 새로운 충전 기법(DP·Dynamic Parallel)을 이용한 확장형 충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DP 충전방식은 소형 전기자동차(50~60kW)부터 상용 대형 전기자동차(100kW~180kW)까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3개 시·도가 참여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4개월간 국비 35억원 등 총사업비 67억여원이 투입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0타경 13457	1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77-1 251㎡	대	31,257,60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177-1 59.5㎡ 부속건물 39.6㎡[창고] 22.6㎡[창고] 제시외 다용도실 15㎡	단독주택	31,257,600	건물포함
2010타경 15224	1	북구 중흥동 720-39 166㎡	대	78,019,860	일괄매각.2010타
		동소 720-39 80㎡ 부속건물 5.28㎡[창고] 1.65㎡[광]	단독주택	78,019,860	경19790[중복]
		동소 720-40 20㎡	도로		
[대지/임야/전답]					
2010타경 14405	1	장성군 남면 마령리 751-12 772㎡	답	57,300,000	일괄매각,농지취
		동소 751-13 2103㎡	답	57,300,000	득자격증명요
		동소 751-14 945㎡	답		
	2	동소 768 1805㎡	전	29,180,000	수목포함,농지취
				29,180,000	득자격증명요
2010타경 14726	1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28-13 2102㎡	답	31,5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1,530,000	요
	2	동소 930-8 1600㎡	답	24,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4,000,000	요
2010타경 15873	2	서구 쌍촌동 376-2 350㎡	전	52,675,000	매각외건물존재함
				51,100,000	,수목제외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0타경 13136	1	서구 치평동 241-3 아트빌 4층 401호 62.9㎡	오피스텔	115,000,000 115,000,000	임차인있음
[기타]					
2010타경 15873	1	담양군봉산면 제월리85-1 1층330.4㎡[실험실등.공유지분] 1635.94㎡[공장.공유지분.실측사정] 190㎡[공장.공유지분] 50㎡[창고.평가외,확인불능] 14.57㎡[폐수처리시설.평가외,확인불능] 7.59㎡[보일러실.평가외,확인불능]33㎡[양생실.평가외,확인불능] 7.04㎡[보일러실.평가외,확인불능] 48.5㎡[창고.평가외,확인불능] 2층 26.2㎡[폐수처리시설.평가외,확인불능]지하200㎡[양생실.평가외,확인불능]제시외주방등272.4㎡	공장등	378,888,540 378,888,5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임차인있음.목록1공유자대원콘크리트주식회사지분10분의8전부
		동소 83-5 54.32㎡[주택.지붕반파] 부속건물32.76㎡[음식점] 36.48㎡[음식점.평가외,확인불능] 76.16㎡[주택.평가외,확인불능]90.51㎡[부속사.평가외,확인불능] 2.64㎡[변소.평가외,확인불능] 제시외방등88.4㎡	주택등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0. 10. 19.[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0. 10. 26.[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